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본격화… 전국 공모 추진

원자력환경공단, 배제기준 12개 확정
활동단층, 지진 규모 5.5 지역 제외
입지 부적합 지역 사전배제 기틀
연내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 계획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뉴시스

수십 년간 표류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하연구·중간저장·처분시설) 부지 확보 작업이 관리사업자의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확정 기준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후보부지 도출 작업에 착수하면서, 내년 지자체 공모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6년 원전 부지 내 포화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 확보를 처음 추진한 이래 수많은 주민 반발과 사회적 갈등 속에 번번이 좌절됐다.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만 경주로 겨우 확정됐을 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은 수십 년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서 공단이 제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가 확정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의 입지에 부적합하거나 부지조사에 제약있는 지역을 사전에 배제하는데 활용된다.

공단은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부지선정 사례와 국내 연구결과,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을 면밀히 분석했다. 아울러 토지이용·개발 관련 법령과 규제 지역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안전성과 부지조사 수행 가능성을 담보했다.

구체적으로 관리시설 건설·운영의 장기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6개 지역은 ▲활동성 단층 8km 이내 지역 ▲리히터규모 5.5 초과 지진 8km 이내 지역 ▲화산활동 지역 ▲석회암 등 불안정 암종 분포지역 ▲천연 지하자원(광산·지하수·온천 등) 분포지역 ▲경주시(중·저준위 방폐장 기소재로 특별법상 제외)가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향후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 신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운반 여건이나 토지이용 규제 등으로 입지 및 부지조사에 제약이 있는 곳은 조건부 배제기준(6개)으로 분류됐다. 여기에는 ▲해안선 미인접 내륙지역(운반 경로상 해안 지자체 등 협의 시 신청 가능) ▲항공기·군사활동 영향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 일시사용 및 형질변경 불가지역 ▲조사 지연 우려지역(세계문화유산·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자체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위원회가 사업 추진 가능성과 소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 신청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번 의결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입지에 부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투명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확정된 12개 기준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전면 적용해 올해 말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 지도'를 도출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기본조사 대상부지 공모를 추진한다.

다만 공단 측은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바로 관리시설 부지의 최종 안전성이나 적합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모를 거쳐 선정된 대상부지는 지질·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거치며 장기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될 예정이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송재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임원장 선임

〈전남대학교 교수〉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 임기
에너지 공급망·탄소중립 과제 이행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 신임 원장에 송재도 전남대학교 교수가 선임됐다. 1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 397차 이사회에서 제15대 에경연 원장에 송 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10월 30일부터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이다. 향후 경영 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송재도
제15대 에너지경제연구원장

1970년생인 송 원장은 충암고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공학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계와 공공 부문에서 에너지 및 탄소중립 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히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며 국가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한국전력공사 비상임이사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 이사 등을 지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송 원장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 이행 과제 속에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원전 공론화委, 원전정책 시민참여단 모집

오는 13일까지 국민기초조사 실시
최종 시민참여단 300명 선정 예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원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기 위한 국민기초조사를 10월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방식은 휴대전화와 집전화 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 거는 방식(RDD)을 채택했으며, 지역·성별·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맞춰 응답자를 확보한다. 조사 전화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걸려 오며, 위원회가 선정한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다.

조사 문항은 지역·성별·연령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원전 공론화 인지 여부, 미래 전력 수요와 원전에 대한 생각,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등이다. 위원회는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 지역·성별·연령대별로 무작위 추첨해 최종 시민참여단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학습을 거쳐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숙의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조사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전화를 받으면 끝까지 응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응답 내용은 통계 목적으로만 쓰이며,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며 "국민기초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숙의토론이 끝난 뒤 최종 결과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국마사회

소방용 드론 등 동원 실전 재난 대응 훈련

한국마사회가 과천소방서와 손잡고 소방용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한 실전형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8일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화재 등 복합재난은 물론 말 전염병 대응과 도핑검사소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말산업 특성을 반영한 위기 상황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훈련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본관 지하 1층 기계실 가스폭발로 대형화재와 전력·통신 장애가 발생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초기 상황 전파와 대피 유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장 대응 및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가 점검됐으며, 부서별 임무와 지휘·보고 체계의 실효성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울러 말 전염병 대응훈련 및 도핑검사소 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비 훈련을 병행해 말산업 현장의 특수 위험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난달 30일 홍의락 가스공사장(왼쪽 세번째) 인천생산기지 현장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홍의락, LNG 하역설비 현장 안전점검

〈한국가스공사 사장〉

취임 이후 첫 현장 이사회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현장 안전관리 연계 강화에 나섰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30일 인천생산기지에서 홍의락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이사회'를 개최하고, LNG 하역설비 안전점검과 현장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이사회는 홍 사장 취임 이후 처음 추진된 현장 중심 이사회 활동으로, 주요 경영 현안을 사업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고 천연가스 생산·공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이사진은 현장 이사회를 열어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LNG 하역설비 등 핵심 생산시설을 찾아 설비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LNG 하역 과정의 위험요인과 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천연가스 생산기지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방안을 확인했다.

아울러 이사회와 연계한 간담회를 열고, 사장의 경영 철학 공유와 함께 현장의 애로 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가을 산불 대응 총력… 148개 구간 통제

국립공원공단, 내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탐방객 집중 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국립공원공단은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예방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낙엽이 쌓이고 대기가 건조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며, 특히 국립공원에 연중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여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산불 위험이 높은 전국 주요 탐방로 148개 구간(연장 668km)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1일간 출입을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곳은 지리산 노고단 고개~장터목 구간 등 총 115개 구간(474km)이며, 33개 구간(194km)은 상황에 맞춰 부분 통제된다. 다만, 나머지 515개 구간(1373km)은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산림 인접 지역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흡연·취사 등 산행 중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가옥과 사찰에 산불 예방 물자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현장 감시망에는 인공지능(AI) 산불감시카메라와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 기술이 전면 투입된다.

/세종=한용수 기자